

## 사설

## 강사료 인상됐지만 처우 개선 같길 멀어

강의료가 시간당 평균 6만 원으로 인상됐다. 우리학교 강사 강의료는 지난 10년 이상 동결되며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최하위권을 기록해 왔다.

우리학교 강사로 일하는 A 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 강의료가 낮은 수준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강사들은 강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강의료 인상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의 변화다. 기존 5만 1천 원에서 약 17% 상승한 것이다. 강사료 인상은 처우 개선에 좋은 신호탄이지만, 여전히 숙제는 많다. 강의실 환경 개선, 참정권 확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전체 교원 중 32%가 강사다. 대학에서 만나는 교원의 10명 중 3명은 강사라는 뜻이다.

그만큼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적지 않기에, 학생이 듣는 수업에 실질적인 질적 향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증진, 참정권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강사들의 소속감 문제는 해묵은 숙제다. 강사 A 씨는 “필요할 때 가족이 필요하지 않을 때 가족이 아닌 경계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토로한다. 강사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사의 참정권 보장 역시 중요한 문제다. 강사가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8명의 자격 요건은 ‘교원 중에서 교수를 대

표하는 교수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다. 대학평의회는 교육, 예·결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회의다. 즉, 현재 강사가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은 강사 역량과 강의 준비 환경,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향상될 수 있다. 단순히 강사료 인상이나 등록금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강사료 인상이라는 작은 불씨를 살려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 맞춤형 학습 시스템, 우수 교원 채용, 융합 교육 등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지난해 대학주보는 강사 처우 개선 문제를 기획으로 다루며 강사법과 관련해 “등록금 인상, 국

고보조금 등 재정 확대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예산팀의 답변을 들은 바 있다.(강사 처우개선, 등록금 동결·국고지원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대학주보 1721호/2024.04.15.) 다만 이번에 취재한 강의료 인상 기사에서 예산팀은 강의료 인상이 등록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의료 인상이 이미 완료된 만큼, 인상된 등록금으로 강사 처우 개선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

이번 강의료 인상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사료 인상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세시봉

## 언론의 무게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지난 16일, 배우 김새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새론 배우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법적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언론이 있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다수의 언론 매체는 경쟁적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다.

한 카페에서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음주운전’이라는 사실과는 다소 벗어난 보도가 속출했다.

그렇게 언론은 ‘동점심을 유도한다’, ‘생활고를 과장한다’는 대중의 반응을 빌미로 논란을 확대했다. ‘논란 즐기는 김새론, 못 고치는 SNS’, ‘김새론 ‘안물안궁’ 뻔뻔 감성팔이’, ‘생활고로 찻값 흥정하는 뻔뻔한 심보’라는 식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클릭 수와 조회수를 우선시하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대중의 조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언론의 역할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과 공정한 보도에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매체가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며 대중을 혼란을 빠뜨렸다. ‘이러한 반응이 있다’, ‘이러한 댓글이 달렸다’라는 식의 보도는 사실상 대중의 입을 벌려 특정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서 김새론을 향한 악플과 비난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김새론 배우의 죽음은 다시 한번 언론의 심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춰내며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알 권리’를 내세우며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행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언론은 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길 바란다. 클릭 수를 위한 보도가 아니라, 논점을 흐리는 기사가 아닌 건강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의 역할일 것이다.

언론이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해야

## 보안 적신호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최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 보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대, 홍익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대의 경우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우리학교 역시 인포21에는 개인정보 성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학사정보 등 각종 정보가 담겨 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보처는 이번 판정에 대해 “지난해보다 검사 기준이 높아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는다. 기준이 어떻게든 간에, 결국 학교의 개인정보보

호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는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한층 증대시키고 있다. 그만큼 학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컨설팅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안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다른 대학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우리학교 역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며 범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대학의 관리 소홀이 다수의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학교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보다 철저한 보안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만평 개인정보 유출 불안하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